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7호
발행일: 2024. 10. 15. (화)
제418회 국회(정기회, 2024. 9. 2. ~ 2024. 1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한류 및 한류산업 확산 지원

나. 육아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6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모두 7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모성보호 3법), (2)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한류산업, 한국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방송 4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일명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6건의 법률안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0인
3	법제사법위원회(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27인
8	교육위원회(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등 15인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 등 18인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7)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의원 등 10인
1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등 10인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1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의원 등 12인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등 10인
2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08인
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등 13인
28	외교통일위원회(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등 10인
29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0인
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등 10인
4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등 10인
4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등 10인
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
5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0인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4	보건복지위원회(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6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등 11인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1인
6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7인
6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등 12인
65	환경노동위원회(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8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등 16인
75	여성가족위원회(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7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한류 및 한류산업 확산 지원, 육아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한류 및 한류산업 확산 지원

개요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알려지는 사회 · 문화적인 현상을 말하며, 1990년 말부터 시작된 한류는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K-팝, K-드라마, K-음식, K-놀이문화 등을 언급하며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평가를 내는 등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을 육성정책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학습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한류와 한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 및 한류산업 등의 확대 ·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법률안, 한국어 · 한국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	2024-09-26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과제목표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
- 인프라 구축 (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
- 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
- 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

(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 · 실감콘텐츠 · 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문체부, 2022. 7. 21.)

② 우리 경제의 도약, K-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 **현황**

○ K-콘텐츠산업 수출은 119억불('20년)로 가전제품(73억불), 디스플레이 패널(41억불)을 추월하여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

○ K-콘텐츠의 활약으로 '21 韓 글로벌 소프트파워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11위(英 브랜드파이낸스), 외국인의 81%가 한국 이미지 긍정 평가

* 국가이미지 영향 요인('21): 문화(33%) > 제품·브랜드(13%) > 경제수준(10%)

○ K-콘텐츠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 자금 부족으로 IP 해외유출 심화*

*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250억원 투자, IP 이전으로 1조원 수익 예상(블룸버그)

⇒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뒷받침

□ **주요내용**

① 영화, OTT 콘텐츠, K-팝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

- (영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3천억원, '23~'25) 및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OTT) 글로벌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드라마펀드('22, 400억원), 제작 인프라 조성*,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등 규제혁신

* 스튜디오 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구축('23),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26)

- (K-팝) 신진 아티스트의 성공적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 지원('23~), 현지 쇼케이스 등 신진 K-팝 가수 해외진출 지원('23~)

②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기업 육성

- IP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IP 펀드, 물적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 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 신설* 등 5년간 4.8조원 공급('23~'27)

* '범죄도시2'는 가치평가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 초기 제작비 투자 유치로 1,200만 관객 돌파

- 콘텐츠기업 성장 및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

* (모태펀드 6종 패키지) ① 문화일반펀드, ② 콘텐츠 IP 펀드, ③ M&A 펀드, ④ 유니콘(모험투자) 펀드, ⑤ 밸류(가치평가연계) 펀드, ⑥ 소외장르 펀드

③ 신기술 융합 한류를 메타버스로 확장

- K-메타월드(한류), 가상 박물관·미술관(문화유산), 한강공원 가상체험공간(한국관광) 등 시공간 초월 한류 콘텐츠 소비 생태계 조성

④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 3년간 1만명 양성

- 산학연 협력 창의인재(원켐퍼스, 3,000명),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재(600명), 번역·수출 전문인력(500명) 양성

- 현장전문가의 예비창작자 교육인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1,300명),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4,600명) 교육

⑤ 콘텐츠·미디어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 OTT, 메타버스 등 새로운 콘텐츠-플랫폼 상생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협의체 구성 및 규제혁신 추진

참고 **한류 주요 성과**

○ (콘텐츠산업 성장) 최근 한류는 전례없는 성과를 창출, 국제적 경쟁력 입증

-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은 2조 3,157억 달러('20년), 미국이 세계시장의 36.5%(1위), 한국은 2.6%(7위) 점유(PwC 2021) * 2위 중국(14.9%), 3위 일본(8.4%)

<대중음악>
○ BTS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 온>(이상 '20년), <마이 유니버스>, <버터>, <퍼미션 투 댄스>(이상 '21년) 등이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
※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싱글차트 1위 생산유발 약 1조 2,324억원, 부가가치유발 약 4,801억원 추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
○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 '브로커' 남우주연상 수상**
○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드라마>
○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클라쓰**', '**킹덤**'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 전 세계적 인기
※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 94개국에서 1위 차지('21.10.13. 기준), 美 에미상 최초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 지명, 14개 부문 노미네이트('22년)

<애니메이션>
○ **핑크퐁 '베이비 샤크 댄스'** 동영상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70억회)
※ 한국 곡 최초로 미국 음반산업협회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인증(다운로드, 실시간 재생 수 등 합산 1천만 건 이상)

<웹툰>
○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세계 13개국에서 1위 기록

○ (수출 증대) 최근 5년간('16~'20년) 콘텐츠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8.7%로 전체산업 0.9%의 20.7배로 비약적으로 성장('20,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관세청)

- 코로나19에도 '20년 수출은 119.2억 달러로 지속 성장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콘텐츠 수출(千불)	6,008,063	8,814,442	9,615,036	10,189,026	11,924,300
국내 총수출(千불)	495,425,940	573,694,421	604,859,657	542,232,610	512,498,038

* '21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는 24.5억달러,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가 7.5억달러로 전년대비 4.3배 상승 및 역대 최대 흑자 기록('22.3월, 한국은행)

○ (파급효과) 소비재 수출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연관산업 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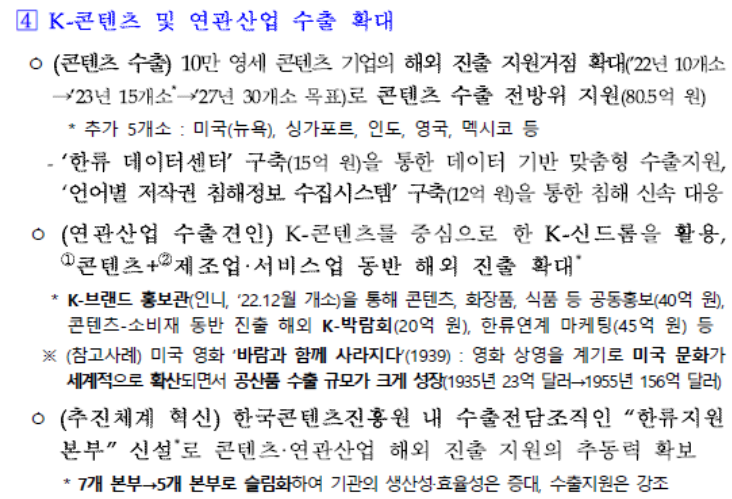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증가

- 특히 비중화권에서 음악·방송·영화 등 비게임 분야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 5.27억 달러 증가('22년, 한국수출입은행)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 정부 업무보고(문체부, 2023. 1. 5.)



4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 (콘텐츠 수출)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거점 확대('22년 10개소→'23년 15개소*→'27년 30개소 목표)로 콘텐츠 수출 전방위 지원(80.5억 원)

* 추가 5개소 : 미국(뉴욕), 싱가포르, 인도, 영국, 멕시코 등

- '한류 데이터센터' 구축(15억 원)을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출지원,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구축(12억 원)을 통한 침해 신속 대응

○ (연관산업 수출견인)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K-신드롬을 활용, ①콘텐츠+②제조업·서비스업 동반 해외 진출 확대*

* K-브랜드 홍보관(인니, '22.12월 개소)을 통해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홍보(40억 원), 콘텐츠-소비재 동반 진출 해외 K-박람회(20억 원), 한류연계 마케팅(45억 원) 등

※ (참고사례) 미국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 : 영화 상영을 계기로 미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산품 수출 규모가 크게 성장(1935년 23억 달러→1955년 156억 달러)

○ (추진체계 혁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수출전담조직인 "한류지원본부" 신설*로 콘텐츠·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 확보

* 7개 본부→5개 본부로 슬림화하여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은 증대, 수출지원은 강조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한류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8.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체계 개선방안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세계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어, 세종학당의 도전과 미래 : 발표자료집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한류를 기반으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누리집

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한류 현황과 국회의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2020. 9. 15.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발표하여 추진 중인 '신한류 진흥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한류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웹툰 등 온라인 확산에 적합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할 필

요가 있다.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도 한류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토론회 · 세미나 등을 통한 정책개발, ② 의회외교포럼 등 의회외교단체와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서 한류를 고려한 정책마련과 실행, ③ 한류 콘텐츠 산업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④ 한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한류에 공헌한 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의 추진 등이다.

중단기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문체부) 2022. 3.
□ 코로나19 이후 중단기적 관점의 문화정책 방향 도출
-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
□ 중단기 문화정책 방향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제 방안 제시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및 콘텐츠 등 분야별 · 전략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시

한류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문체부) 2018. 6. 13.
-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과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 및 정책 입안자, 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을 개발함.
해외의 한국문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와 SNS, 뉴스 등에 작성된 게시물 등을 통해 행동 --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함. 정형, 비정형7)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류 문화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한국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나. 육아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개요

일 · 가정 양립 지원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수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 · 가정 양립 지원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4-1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제2023-5호 육아 지원 강화, 제2021-4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이슈 등 참조). 최근 국회는 같은 맥락에서 일명 모성보호 3법을 새롭게 입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바꾸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이 외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등).	2024-09-26 (원안가결)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략) 한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과제목표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주요내용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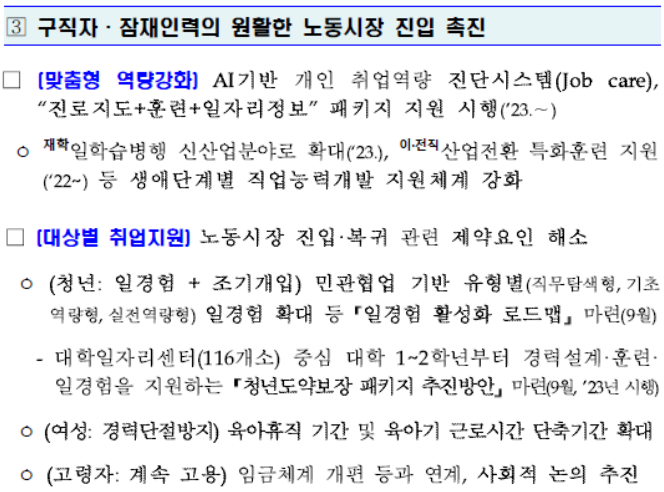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고용노동부, 2022. 7. 15.)



3 구직자·잠재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맞춤형 역량강화] AI기반 개인 취업역량 진단시스템(Job care),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패키지 지원 시행('23.~)

○ 재학일학습병행 신산업분야로 확대('23.), 이전직산업전환 특화훈련 지원('22~) 등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강화

□ [대상별 취업지원] 노동시장 진입·복귀 관련 제약요인 해소

○ (청년: 일경험 + 조기개입) 민관협업 기반 유형별(직무탐색형, 기초역량형, 실전역량형) 일경험 확대 등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마련(9월)

- 대학일자리센터(116개소) 중심 대학 1~2학년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 마련(9월, '23년 시행)

○ (여성: 경력단절방지)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 (고령자: 계속 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 사회적 논의 추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9.)

2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 (청년) 「재학 → 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제고

○ 고교 현장직무·역량 기반 **직업계고 신기술훈련 강화** 및 **일학습병행 확대***

* ①첨단산업 아카데미 12개소, ②신기술 유망분야 55개 학과, ③경력개발 고도화 지원 10개소

○ 대학 **재학 중 조기개입, 직업훈련·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규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0개교 시범 실시
(내용) 빌드업(저학년):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 점프업(고학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지원

○ **일경험 지원 확대**(1→2만명,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도전준비금 신설**(최대 300만원, 8천명)

□ (여성) 출산-육아-돌봄의 全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경력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 개편

* ❶ 육아휴직: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 휴직기간 1→1.5년 확대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확대(만8세 → 12세 이하) 및 사용기간 확대
❸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경력단절여성DB 기능 개선, 대체인력 취업알선 내실화)

○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23.下,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속 구제 등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 고용상 성별현황(채용·임금·임원 비율 등) 공시를 통해 자율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훈식 의원안: 육아휴가 제도 도입 등 2024. 9.
한민수 의원안 등: 일 · 가정양립지원제도관련 2024. 9.
박용갑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산정기준을 근로일로 명시 등 2024. 9.
김정재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2024. 8.
모경종 의원안: 육아휴직의 조부모 사용 허용 및 분할사용 유연화 2024. 9.
정성호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 방법 변경 등 2024. 9.
김선교 의원안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등 2024. 9.
송언석 의원안: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24. 9.
송언석 의원안: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 포함 등 2024. 9.
한병도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등 2024. 9.
이수진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2024. 9.
조지연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2024.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성훈 의원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024. 9.
송옥주 의원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및 지급 대상 변경 2024. 9.
박정 의원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원 등 2024. 9.
서범수 의원안: 육아휴직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에 대한 동료수당 도입 등 2024. 9.

한병도 의원안: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2024. 9.
한정애 의원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확대 2024.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안: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30일 가산 2024. 9.
박정 의원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간주 범위 확대 등 2024. 9.
김정재 의원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간주 범위 확대 등 2024. 8.
박해철 의원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 확대 2024. 9.
임이자 의원안: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근거 마련 등 임금체불 예방 조치 마련 2024. 9.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제3차 국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인구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한 컷으로 보는 2025 예산안] ①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멀티미디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 육아휴직 조부모의 대신 사용 및 분할 사용 확대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2024. 2. 5.
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기여 요인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제도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근로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일 · 가정 양립, 그리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외국과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NARS 입법정책」2022. 5. 17.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진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 고자 함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1-03 2021. 12. 30.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시행될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 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3-03 2023. 12. 29.
본 연구는 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연구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집단을 파악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먼저 육아휴직 사용의 불균등 정도를 파악하고 육아휴직 사용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의 사용이 개인과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에 제약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연구는 성별, 근로 환경별, 개인 특성별로 육아휴직 사용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자 체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확 인하였다.

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요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를 악용하여 만들어진 영상을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이를 악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제작, 정치인의 발언 조작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증가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딥페이크 · 딥보이스 탐지 솔루션 개발 등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등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영상물의 편집 · 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 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2024-09-26 (수정가결)
2	여성가족위원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 ·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 · 청소년	2024-09-26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을 협박 · 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 ·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 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	2024-09-26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 여가부 · 금융위)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 · 위증 · 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 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무고 · 위증 · 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 · 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120대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 방통위 · 여가부)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 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지원 · 경제적지원 · 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 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 · 방통위 · 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 · 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 · 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2023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2023. 1. 26.)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사회의 암적 존재인 조직폭력범죄 근절

- ▲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직폭력배 척결('23. 상) ▲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 구축 및 폭력조직 관련 정보·DB 공유('23. 상)

○ 전세사기 엄단 및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 ▲ 조직적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집중 단속*('23. 상) ▲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23. 상) ▲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간이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22. 11. 및 '23. 1. 입법예고)

*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지속 시행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민간전문가 등 참여('22. 12. 출범)

○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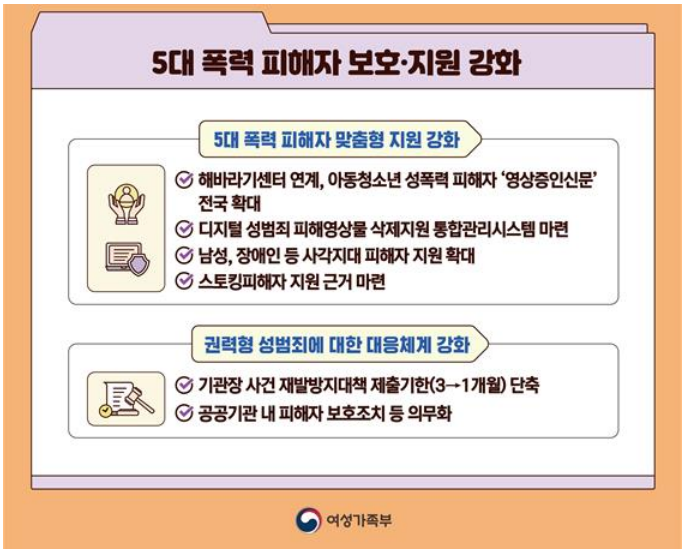
- ▲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국외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주범 적극 송환('23. 상)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3. 상), 사건처리기준 강화, 스토킹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엄단('23. 하) ▲ '제2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적극 대처('23. 상)

* 태국 등 아세안 지역 신생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 예정('23. 상)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2. 7. 25.)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 정부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3. 1. 30.)

☐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 **(통합 지원)**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통해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추진('23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유관기관(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원

○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10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17개소) 신규 지원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부문) 개발·보급('23년)
* 스토킹 피해 단계별 심리지원 방안 및 피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 개발·보급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방통위, 감·경) 협업 및 중앙·지방 간 정보 공유·삭제 지원 강화
* 지역특화상담소 확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확충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정황 발견 시 경찰, 피해지원기관 등에 직접 연계하는 실시간 신고·대응체계 마련(민·관 협업)

○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보호시설의 입소 자녀 범위 확대(영유아→아동) 및 학생 대상 교통비 등 신규 지원(연 48만원 이내)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 현실화 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 **(권력형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최초 공표('23년) 및 기관장 등 사건에 대해 조직문화 컨설팅·피해자 보호 강화
*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성폭력방지법 등 개정 추진)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시스템 구축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 9.
이해식 의원안 등: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이해식 의원안: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병진 의원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4. 9.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 삭제지원과 유포방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4. 9. 24.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 양상은 진화하는데 피해자 지원체계는 인력 · 예산 등 물리적 한계, 피해영상물의 높은 미삭제율,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삭제지원과 유포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역외사업자 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통계구축, 구상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 처벌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4. 9. 10.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건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AB-11 2024. 4.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선행연구 및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국내외 대응체계를 고찰하였으며, 전문가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여가부) 2019. 12.

-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
- ㅇ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안) 도출
-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ㅇ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도출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